

“구제역 전남 유입 막아라” 한파속 방역 사투

광양~하동 섬진교 차단 총력전

도간 경계 초소·인력 대폭 늘려

25일 광양시 다압면과 하동군을 잇는 섬진교 다리 입구의 방역요원들의 얼굴과 손은 매서운 심진강 칼바람에 빨갛게 댔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뿌려지는 소독약으로 두꺼운 얼음벽이 생긴 초소 앞에서 이들은 축축히 젖은 방역복을 입고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있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원들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다. 야간에는 열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강추위와 싸워야 한다.

하지만 경남 김해군 주촌면 양돈농가 등 2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뒤부터 모든 신경이 지나다니는 차량을 살피는데 곤두서 있었다.

이 방역초소는 경남 하동군과 다리 하나를 경계로 두고 있다. 다리를 넘어면 바로 경남으로, 전남으로 이어지는 접경지역인 만큼 불안감이 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방역 저지선을 뚫고 경남까지 내려온데다, 경남의 구제역이 다른 가축으로의 전파 및 전염 속도가 무려 3000배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진

돼지라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설을 앞둔 초조함도 한몫하고 있다.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른 상황에서 현재 차단 방역에도 한계가 있는데, 명절 대이동이 시작될 경우 확산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한 직원은 “1일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하고 교대하면 몸이 녹초가 된다”면서 “그래도 지역으로(구제역이) 들어오면 지역 축산 농가가 다 죽는 걸 생각하면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료 차량은 이들의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다. 축산농가를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게 의해 구제역이 전염된다는 게 유력한 만큼 사료·분뇨 차량에 대한 방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구제역의 대부분은 축산농가를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구제역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 방역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 등에 대해 철

저히 소독한다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 등 방역 당국은 26일부터 도간 경계에 대한 차단 방역에 집중한다. 전남도 등은 돼지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차단방역에 실패하면 바이러스는 검출할 수 없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백신 접종도 수급난으로 도내 돼지에 대한 접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만큼 차단 방역 외에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5일 22개 시·군·구 수 영상회의를 열고 순천(8개소)·광양(9개소)·곡성(12개소)·구례(6개소) 등에 설치된 방역초소를 대폭 확대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순천(84명)·광양(30명)·곡성(87명)·구례(38명) 등의 도간 경계 이동 통제초소 인원을 대폭 늘려, 고속도로와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와 차량이 움직일만한 곳까지 방역 인원 투입을 지시한 상태다.

이들뿐만 아니라 22개 시·군·구 차단체 가용 인력을 총동원, 구제역

방역에 주력하고 이동 통제초소 근무에 전력을 기울일 것도 주문했다. 농가들도 축사 소독 및 외부인 통제 등 방역에만 매달리고 있지만 언제 제왕이 닥칠지 몰라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축사 방역 및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사료·분뇨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를 방문해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과 함께 ‘청정지역’이었던 경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경계를 마주한 전남도 방역당국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오후 광양시 다압면과 경남 하동군 하동읍을 연결하는 섬진교 방역초소에서 진·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 /경남 하동=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쇼핑몰 ‘남도장터’ 인기몰이

설 주문 하루 500건...평소보다 두배 늘어

설을 앞두고 남도장터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남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탓에 전국 곳곳에서 명절 선물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www.jnmall.com) 주문량이 하루 500건을 넘어섰다.

평소 주문량(200건~300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전남산 특산물을 주문하는 소비자들도 수도권, 경남·북,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남도장터는 대표적인 지역 쇼핑몰로, 남도미향, 전남미, 해피굿팜 등 3개 쇼핑몰과 통합하면서 입점업체만 235개 업체, 품목은 무려 2100여개에 이른다.

설을 앞두고 특히 인기있는 상품은 ▲장성·구례 꽃감 ▲영광 굴비 ▲장흥 표고버섯 ▲완도 해조류선물세트와 전북 ▲나주배

등으로 명절을 앞두고 평균 주문 건수가 200건을 넘어섰고 최대 500건에 이른다.

남도장터가 취급 제품의 신선도와 우수성은 물론 신상품 발굴, 우수고객 산지체험, 유기농 회원제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판촉 등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 소비자포럼 등이 선정하는 최고의 브랜드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매출액도 100억원을 돌파, 전년도 같은 시기(43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고 5000만 원 이상 판매한 업체가 26개에 이른다. 전남도는 올해 매출액 목표도 이같은 인기로 힘입어 200억으로 늘려잡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5명이던 담당 직원을 10명으로 늘리고 비상 근무에 나섰지만 새벽 1~2시까지 근무하는 일이 많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명절 선물 안받고 안주기 운동 확산

광주시교육청·전남경찰청·광양제철 등 캠페인

설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행정기관과 기업체에서 선물·떡값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취국 교육감은 최근 각급 학교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취임 당시 교육계 비리 근절을 공약으로 내걸긴 했지만, 설을 앞둔 시점에 명절 떡값 수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청문감사관 화상회의를 통해 ‘설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자정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캠페인 내용은 택배 물품에 대해 배송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불가피하게 수취한 물품은 ‘포퓰이 양심방’에 신고하라는 것이다. 또 각 경찰서 청렴동아리에서는 정문 앞에서 택배 물품을 돌려보내기로 했다.

영광군 공무원노동조합은 노조 홈페이지에 ‘설 금품 선물 수수 신고방’을 마련하는가 하면 군청 건물에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27일에는 직원들

에게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은 9년째 선물반송센터를 운영 중이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9일부터 문서수발실에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선물을 즉각 반송 처리하고 반송할 수 없는 물품은 사외에 기증하거나 사내 경매를 통해 사회 공헌근거에 맡기고 있다.

5년 전부터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하는 KT광주마케팅단도 이번 설을 맞아 자진 접수센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자체 감사활동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도 각 부서 협조문을 통해 직원, 하도급업체로부터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설 선물을 사양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광산구 의원들은 구청 공무원들에게 ‘설 선물은 오로지 따뜻한 마음과 정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방역당국 미온 대처 구제역 키웠다

수의과학검역원 초기대응 실패 자인...백신접종후 한달간 소독 당부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 미흡, 구제역 최초 확인 전에 이미 타지역으로의 바이러스 전파, 한파로 인한 방역 애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구제역 확산원인과 전파경로를 분석해 중간 발표한 문제점들이다. 방역당국이 스스로 구제역사태의 초기대응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땀집 처방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간이키트에 안 의존 사태 키워= 25일 검역원에 따르면 작년 11월23일 안동의 돼지농가에서 처음 구제역 의심신고했으나 당국은 간이키트 검

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사태를 키웠다. 결국 그달 28일 해당농가는 구제역 양성 확정판정을 받았다.

이후 당국은 부랴부랴 차단방역에 나섰다지만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구제역 바이러스는 이미 주위를 오염시킨 뒤였다.

검역원은 “이 양돈단지의 돼지에서 감염원체가 검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병 뒤 이미 여러 날이 지났고, 농장을 통제하기 전에 이미 돼지에서 배출된 바이러스가 농장주변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

혔다.

검역원은 이어 “(구제역에 감염되면) 황체가 생기기 전에도 임상증상이 나타나므로 11월23일 검사자체가 음성으로 나온 것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당시 방역관계자들이 상부에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다면 초동대응을 일주일 정도 빨리 시작했을 수 있다”면서 초동대응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는 하루 약 10억 개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당시 안동의 해당 양돈단지의 사육두수가 1만7천두로 이 가운데 5%가 구제

역에 감염됐다고 가정해도 850×10억개의 바이러스가 배출된 것으로 검역원은 추산했다.

소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 4~10개, 돼지는 300~800개의 바이러스로 감염이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근 지역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오염됐음은 자명한 일이다.

◇철저한 소독 거듭 당부=이미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 그래도 농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준수해야 할 수칙들이 있다.

검역원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 2주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고 그 전후에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백신접종 이후에도 최소 한 달간 강력한 차단방역과 소독 실시 ▲한파로 소독이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해 해빙기에 철저한 주변소독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에 소독 실시 등을 거듭 당부했다. /연환수

구제역·AI 조기 해결 촉구 범국민비상연석회의 발족

민주노동당과 환경정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0여개 정당·단체는 25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비상연석회의’를 발족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종로구 청운동주 민선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가 전염병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며 “축산 피해농가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계 대책회의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